국토교통부		보	도 자 료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학신 저는 나는 자기 남
		배포일시	2019. 12. 11.(수) 총 3매(본문3)	1
담당 부서	기술정책과	담 당 자	<ul> <li>• 과장 엄정희, 서기관 최용현, 사무관 성언수,</li> <li>주무관 김연규</li> <li>☎ (044) 201-4990, 4997, 4994</li> </ul>	
	시설안전과		• 과장 김태곤, 사무관 이용재, • ☎ (044) 201-4594, 3588	주무관 전미자
보도일시		2019년 12월 11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1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11일 공청회서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위한 열린 토론 '20년 1월 1일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청취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(안)도 마련키로

- □ 기반시설의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의 수립 근거인 「지속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」시행(20년 1.1일)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린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(안)과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공통기준(안)을 마련하였고, 이에 대한 관계기관,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12월 11일(수)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.
  -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기반시설 관리의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년 12월부터 '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\*'을 구성·운영하여,
    - \* 국토부 제1차관(단장), 기재·과기정통·행안·농식품·산업·환경·해수부 실·국장급
  -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을 위한 '지속가능한 기반 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'을 올해 6월에 발표하였으며, 이와 함께 기본계획(안)과 공통기준(안)을 마련하였다.

## 【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】

- □ 이번에 처음 수립되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으로, 우리나라 기반시설 관리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한 초석 역할을 한다.
- □ 이번 계획은 "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, 고품격 생활안전 추진"이라는 비전 아래,
  - ①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, 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,
    - ③ 안전투자 확대 및 투자재원 다각화, ④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이라는 4대 전략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,
  -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, 광역지자체 등 시설별 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기반시설 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될 전망이다.

## 【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】

- □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목적은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, 성능개선 공통기준은 유지관리보다 성능 개선이 유리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.
- □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통해 그동안 시설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등급이 없던 시설도 안전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, 안전등급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·이행하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통해 시설의 성능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여, 무분별한 성능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 하고,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- □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의 주제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,
  - 관계 기관 및 기반시설의 관리주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**기반** 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.
- 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을 확정·발표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